

화천군민 산천어축제 역대급 흥행 일등공신

행정·군부대·사회단체 협조
군자원봉사센터 열정적 활동
주민 성금모아 선등거리 행사

27일 폐막한 화천 산천어축제의 역대 최대 흥행은 주민들의 애정과 열정적 인참여가 있어 가능했다.

또한 행정과 군부대, 지역사회단체 등 범군민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펼쳐진 점이 최대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군자원봉사센터(소장 이부영)를 중심으로 한 주민 자원봉사시스템은 큰 몫을 했다. 봉사에 나선 주민들은 “축제를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보다는 축제를 함께 즐긴다는 생각으로 도왔을 뿐”이라고 말해 산천어축제가



화천지역 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개최한 선등거리페스티벌 전국 노래 자랑이 지난 26일 선등거리에서 열렸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군의 2018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98%가 ‘산천어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군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봉사가,

사회단체는 물론 경찰과 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이 마치 잘 맞는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축제 성공을 위해 함께 뛰었다. 농업인들은 최고 품질의 농산물로, 교통 근무자는 깔끔한 주차 안내로, 재난구조대는 꼼꼼한 축제장 수중

점검활동으로, 낚시 가이드는 친절함과 배려로 축제 성공의 주춧돌이 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역사회단체의 헌신적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군의회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산천어축제 선등거리페스티벌이 무산되자,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행사를 추진했다. 사회단체와 주민, 노인회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산천어축제가 간 선등거리페스티벌을 치러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문순 군수는 “23일 동안 산천어축제를 사랑해주신 모든 관광객들에게 내년 더 흥미진진한 축제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23일 간의 축제를 위해 1년을 준비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수영

건설업, 성장률 기여도 '7년來 최저'

지난해 -0.2%p 기록... "일자리 창출 효과 위해선 건설투자 확대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서 건설업 기여도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만큼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2.7%)을 건설업이 잡아먹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건설업 성장기여도는 2011년 0.3%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은 전체 경제성장률을 견인해왔다.

2015년 0.3%포인트를 기록했던 건설

업 성장기여도는 2016년에는 0.5%포인트로 높아졌고, 2017년에는 0.4%포인트였다. 2015년과 2016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8%였고, 2017년 성장률은 3.1%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규제 강화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감축 등이 본격화되면서 건설투자가 크게 줄었고, 전체 성장률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진 것이다.

대신 가계소득 확대로 대표되는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민간소비는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경제성장률을 앞질렀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기는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면에 계속 권해석기자 haeseok@

▶ 1면서 계속

건설업, 성장률 기여도 '7년來 최저'

문제는 현재 고용여건을 고려하면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2009년 8만 7000명이 감소한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001년(4%) 이후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역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건설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투자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당장 올해 건설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자리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